

대학의 기능 - 연구기능 : 교육기능

안 경 환 서울대법학과 교수

1. 머리말

“나에게는 왜 대학생 친구 하나 없나?” 이 나라의 현대사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면서 노동운동의 순교자로 자리잡은 ‘아름다운 청년’이 분신자살에 앞서 남긴 탄식의 변이다. 1971년, 청계천 피복 노동자 전태일이 자신의 몸에 기름과 불을 끼어 었는 소신공양의 의식을 통해 ‘착취’의 제도에 항의할 당시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은 하나의 견고한 신분이었다고 대학은 이러한 신분의 제조장이었다. 대학을 다닌 사람과 대학의 문을 두드리지 못한 사람은 평생의 신분이 구분되었다. 그로부터 30년, 이제 더 이상 대학은 것처럼 견고한 신분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한 양적 성장과 팽창의 길을 달려오면서 대학생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젊은이가 되었을 뿐이다. 이제는 대학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동안 사회적 신분이 확보되는 시대도 아니다. 수많은 대학이 설립되거나 팽창을 거듭했고 대학생도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신분은 존재한다. 대학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에 가까운 서열이 존재하고 개인의 능력 못지 않게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는 사실이 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다시피 한다. 뿐만 아니

라 어느 대학을 ‘졸업’ 했는가라는 신분 심사의 기준은 어느 대학에 ‘입학’ 했는가라는 사실로 대치된다. 지극히 느슨한 대학의 학사관리는 중도 탈락자를 모르고 대학에서 얼마나 성실한 과정을 보냈는가 졸업 후 진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특정 대학의 입학과 동시에 평생의 신분이 사실상 결정되는 사실, 모든 국민에게 인생을 열 아홉 살에 결산하도록 강요하는 사실이 우리 나라 대학이 가진 문제점을 웅변으로 예증한다. 이 글은 우리 나라 대학이 당면한 수많은 문제점 중에 흔히 대학의 양대 기능이라고 말해지는 연구와 교육의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주력한다.

2. 경쟁의 영역과 복지의 영역

한 나라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경쟁과 복지의 이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점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이 사회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는 국민이 대학에게 어떠한 역할을 부과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대학이 나라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려면 대학 내에 경쟁의 미덕과 질서가 정착되어야만 한다. 그 동안 우리 나

라 대학 교수들에 의해 주장된 내용은 주로 신분을 기초로 한 개인과 교수집단의 복지에 관련된 것이 대종이었다. 개별 교수의 신분 보장과 적절한 수준 이상의 봉급의 확보 등 복지문제에 치우쳤다. 대학 내의 학문의 경쟁체제는 자율적으로 도입되기 힘들었다. 세부전공의 분화의 가속화와 교수 사이의 지적 경쟁보다는 인화를 더욱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었다. 교육당국에 의한 경쟁체제의 유도 또한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부당한 규제로 인식되어 강한 거부 의 대상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대학은 경쟁보다는 복지의 이념이 지배하여 왔다.

3. 기능의 분화 - 교육과 연구

대학의 양대 기능인 연구와 교육이 분리, 대립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둘 다 중요하고 따라서 누군가에 의해 수행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학에 따라 주안점을 달리하는, 대학 간의 적정한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이 주로 학사과정의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될 인력의 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고급인력의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연구의 지원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중심대학 - 교육중심대학의 구분이 대학 간의 기능의 분화보다는 등급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만약 대학이 탈바꿈하지 않고 현재



의 상태를 고집한다면 그럴 위험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 평등해야 한다는 복지의 이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대학 간의 기능의 분화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필연적인 정책일 것이다.

(1) 교수의 기능 분화

우리 나라에서처럼 '교수'라는 직업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다양하고도 불명한 나라는 드물다. 교육과 연구, 그리고 학내 행정을 포함한 사회봉사, 그 어느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교수의 역할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교수가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는 없다. 사람에 따라 적성과 능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중에 공식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연구의 영역뿐이다. 그나마 질적 평가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양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 전공의 특성에 무관하게 거의 일률적으로 행해진다. 교육의 부분은 '책임시간'이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교수가 어떤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가에 관한 수강생의 강의평가제도는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전공필수'의 틀로 수강이 강제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평가가 더욱 인색하다. 수강이 강제되지 않고 학생의 선택에 맡겨진 과목은 강의의 질적 경쟁보다는

학점의 선심 경쟁의 장이 되기도 한다. 행정직의 수행을 통한 기여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며 심지어는 행정직을 교수의 외도로 간주하는 경향까지 있다. 행정의 전문성보다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인식하기에 상위보직은 선호하되, 하위보직은 기피하는 현상이 농후하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 사회의 총체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대학에 따라 연구

와 교육의 중점이 달라야 하듯이 개별교수의 역량과 적성에 따른 역할과 기능의 분담이 요청된다. 만약 어느 것도 경시할 수 없다면 일정한 연륜이 쌓 때까지는 (이를테면 정년보장의 시점까지) 교육과 연구 두 부분에서 함께 구비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교수의 특장에 따라 교육, 연구, 또는 행정의 분야에 주력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나이에 따라 연구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분야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분업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2)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기능 분화

과연 우리 나라가 제대로 된 사립대학을 가질 '여유'가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제단은 취약하며 동창생과 일반인의 재정기여 전통이 약하고 기부금 입학에 대한 규제가 강한 나라에서 사립대학이 어떻게 일류의 연구력을 보유했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사립대학도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사립대학이 최일류의 연구력을 보유하는 나라는 미국 정도일 뿐이다. 그것은 고도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 아래서 사립대학의 운영은 일반의 수요와 상대적 경쟁력이 확보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 짐은 당연한 이치이다. 시의에 따른 경쟁성에 무관하게 국가가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는 국립대학의 몫일 것이다. 국립대학의 운영방법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식으로 모든 국립대학을 평준화된 동일한 체제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국립대학 사이에 분화를 이룰 것인가, 이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이다. 흔히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 중심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원론적 설득력을 보유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 교육의 문제

(1) 입구통제에서 출구통제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대학이 가지는 현저한 특성 중의 하나는 인생의 조기결산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입학과 동시에 일생의 좌표가 결정되다시피 하는 실정이다. 대학의 입학은 어려우나 졸업은 몹시도 쉽다. 지나치게 세분된 전공을 기준으로 일단 무슨 학과의 일원이 되면 학생의 모든 활동은 그 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입구통제의 방식은 교수의 능력을 경쟁적으로 제고시키는 데 장애가 된다. 과거에 입학시험에 본고사를 고집하는 대학일수록 '고교교육의 정상화'라는 대학의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명분으로 대학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결과가 되었다. 고교교육의 문제는 고등학교와 국가의 정책에 맡겨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았건 대학은 대학 스스로가 설정한 교과과정의 내용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였다면, 사회의 지성인이라 고급 인력이라는 대학교수가 입시에 매달려 귀중한 연구와 교육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줄었을 것이다. 특정대학에 입학한 사실보다는 그 대학에서 수확한 결과가 더욱 중요한 교육성과의 지표가 되려면 대학 교수 스스로의 각성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의 대학교수에게서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 흔히 말하듯이 자리가 보장되고 여유의 시간이 많은 교수라는 자리에 수반되는 책임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수요자 중심의 체제로

우리 나라 대학에서 교수의 주인의식은 너무나 뚜렷하여 모든 면에서 대학의 학사운영이 교수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수의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학생과 국민의 수업권의 내실화도 중요한 것이다. 최근에 들

어와 학부제, 협동과정, 복수전공, 전과, 편·입학 등의 수요자 중심의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공동강의, 대학 간 교환강의 등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제도가 보다 널리 실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수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연구의 문제 - 경쟁체제의 정착

몇 년 전에 어느 이공계 대학 학장이 제기한 '메기와 미꾸라지' 론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식용 미꾸라지 집단을 오래 살리려면 미꾸라지 통에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는다는 것이다. 분명히 몇 마리의 미꾸라지는 메기 밥으로 희생되지만 나머지는 죽지 않으려 정신을 바짝 차리기에 더욱 오래 산다는 것이다. 학장 자신이 메기의 악역을 담당하여 교수 전체의 연구력을 증진시키겠다는 각오였다. 과연 경쟁이 집단의 연구력을 제고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인인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선진국의 예를 보면 대체로 그러하다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경쟁체제가 정착하려면 물론 경제적 유인동기가 필요하다. 정책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연구성과에 따른 봉급의 차등지급 등의 기본적 유인책은 물론 수명이 짧은 분야의 교수는 정년을 단축하는 대신 고액의 봉급을 지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의 전환이 요청된다.

6. 맺음말

우리 사회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중진국의 수준을 넘어선 것은 의의가 없다. 분명히 절대빈곤의 상태는 벗어났고 또다시 그런 상태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다. 이러한 발전의 과정에서 대학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제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은 경쟁과 복지의 문제이다. 경쟁사회를 지향하여 경쟁의 결과를 분배와 복지에 투여할 것인가. 아니면 복지를 우선적 가치로 하여 경쟁을 완화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 선택의 문제이다. 대학이 경쟁의 장인가. 아니면 복지의 장인가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이다. 특정대학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는 그 대학이 선택할 문제이기도 국민이 관여할 문제이기도 하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수가 전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

안경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석사, 산타클라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 대학 기획실장과 런던 정경대 방문교수, 남일리노이대 방문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미국법의 이론적 조명」, 「법과 문학 사이」 등 14권이 있다.